

충남리포트 제147호

ChungNam Report

2014. 12. 25.

충남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종윤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원, space@cdi.re.kr
임재영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chyim@cdi.re.kr

충청남도에서 중앙정부 대형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하는데
필요한 지원체계의 구축 및 관련 작업이 요구됨

요 약

- 충남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과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충족 등을 위한
재원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도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음
- 타 지역들에서는 지역의 한정된 재원문제 해결과 지역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형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내 추진되는 사업
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 충남에서는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 예를 들어 도로와 철도사업 등을
추진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문화, 환경, 해양, 항만, R&D 연구
개발사업 등 다양한 대형국책사업 유치에 있어서는 활발하게 진행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충남의 미래 선도산업 조성과 기반시설 등의 확충,
다양한 대형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리고 도내 수행되는 각종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CONTENTS

〈요 약〉

1. 충남 대형국책사업 유치 필요성
2. 대형국책사업 유형 및 절차
3. 타시도 국책사업 대응 및 시사점
4. 충남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 진단과
과제
5. 대형국책사업 발굴 지원 강화 방안

충남 대형국책사업 유치 필요성 ◀

01

- 충남 지역경제의 활력과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GRDP 증가율은 불변가격기준 2012년 현재 전년대비 2.23%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¹⁾
 - 이런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지역에선 실업률 증가 → 지역주민 소득 감소 → 소비둔화 → 생산둔화로 이어지며, 생산둔화는 다시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경제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력과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임
- 또한 충남은 도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함
 - 지역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표출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정의 필요한 재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2014년 기준 충남의 재정자립도(30.2%)가 전국평균(44.8%)에도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임
- 타 지역에서는 지역의 재원문제 해결과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충남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형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한 지원체계 모색과 도내 수행되는 각종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1) 불변가격기준 2010년 GRDP 전년대비 증가율은 11.11%이며, 2011년에는 7.38%임

1. 대형국책사업이란?

- 대형국책사업은 관련법령²⁾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며,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그리고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를 지칭함

2. 대형국책사업 유형 구분

- 대형국책사업을 사업내용에 따라 유형화하면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기타재정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 대형국책사업 유형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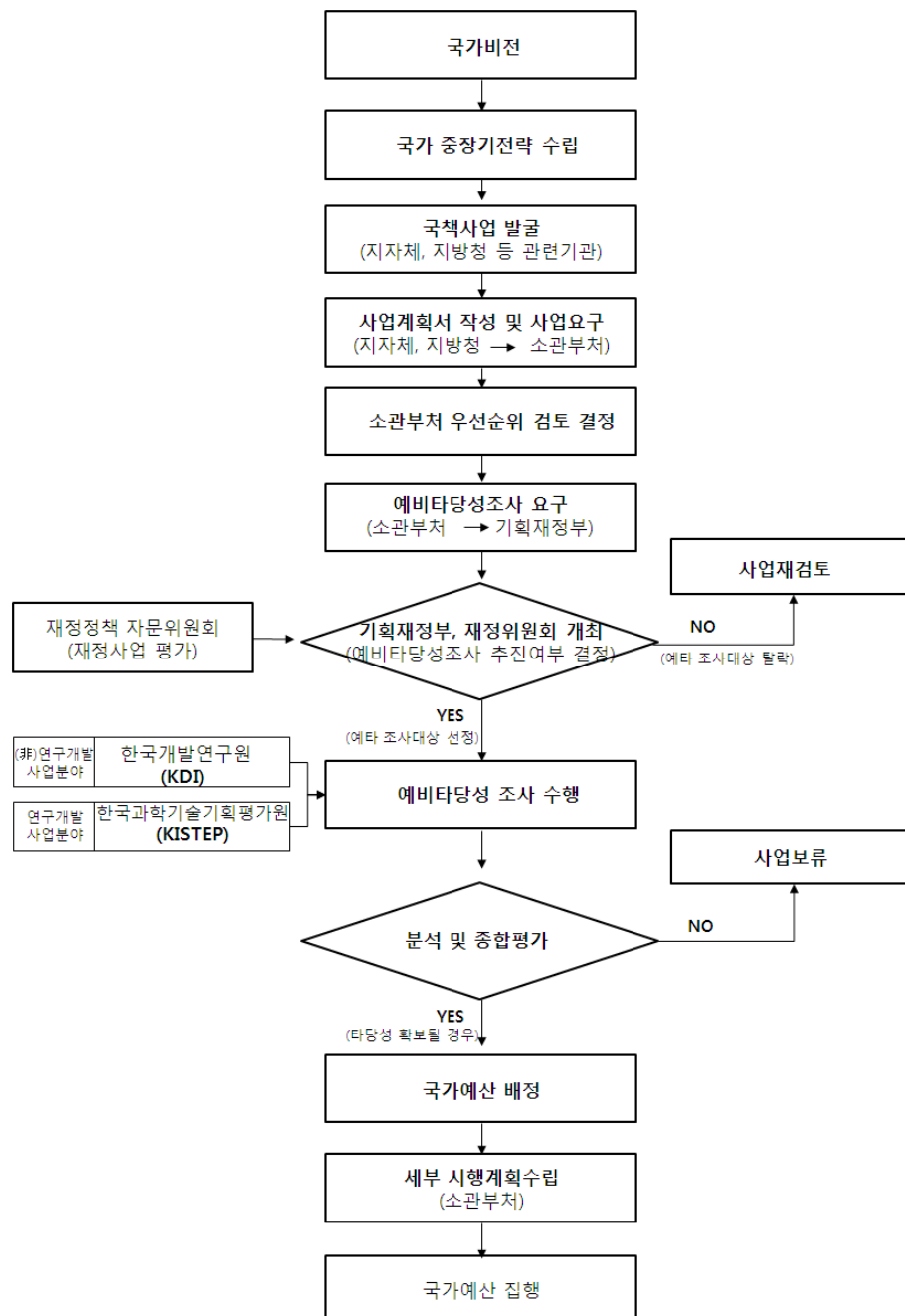
사업구분		사업 내용
건설사업		토목, 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 시스템구축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축, 연구단지 조성사업
	순수 R&D 사업	연구기술개발 사업
기타재정사업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중기재정지출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201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 「국가재정법」시행령 제13조

3. 대형국책사업의 추진 절차

- 국책사업의 추진은 일반적으로 “사업구상(사업발굴)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요구 → 예비타당성조사요구 → 예비타당성조사수행 → 세부시행계획수립(기본계획, 실시설계) → 사업시행” 등의 순으로 진행됨



〈그림 1〉 대형국책사업 추진 절차

1) 사업 구상 단계

-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기능, 입지, 시설 등을 개략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임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요구 단계

-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 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작성하고 지자체 또는 지방청에서 국가 소관부처에 사업을 요구하는 단계임

3) 예비타당성 요구 단계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단, 관계청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매년 2회(7월, 11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단계임
 - 사업계획서에는 사전타당성분석 검토 내용이 반영 되어 있어야 예타 통과가능성이 높음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단계

-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증하고 판단함
 - (그림1)에서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함

5) 세부시행 단계

- 예타가 통과된 경우 중앙부처 소관부서에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함

타시도 대형국책사업 대응과 시사점 ◀

03

- 각 광역 지자체별로 국책사업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현황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음(2014년 12월 기준)
- 여러 광역시·도들에서 특별 전담조직(센터)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태임
- 센터 주요업무는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 분석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지자체 내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지원함
 - 신규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신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자문과 검토
 -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한해 사전 타당성분석 수행
 - 사업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B/C) 지원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관련된 대응 업무지원
 - 투융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위한 자료 지원 등

<표 2> 타지역 국책사업 및 지자체 공공투자사업 대응체계 구축 현황

지역	명칭	조직	주요 업무
가	공공투자 관리센터	총 17명 - 센터장(1명) - 팀 장(3명) - 연구원(13명)	1. 투융자사업 분야 - 투융자심사 위한 타당성 검토, 조사 2. 민간투자 분야 - 적정성, 타당성 조사
나	공공투자 관리센터	총 6명 - 센터장(1명) - 팀 장(2명) - 연구원(3명)	1. 신규 국책사업 분야 - 예타사업 추진지원 2. 투융자사업 분야 - 투융자사업 심사지원

지역	명칭	조직	주요 업무
다	공공투자 분석센터	총 4명 - 센터장(1명) - 전문위원(1명) - 전임연구원(1명) - 행정원(1명)	1. 신규 국책사업 분야 - 예타사업 추진지원 2. 투융자사업 분야 - 투융자사업 심사지원
라	2015년 센터 설립 추진 중		
마	범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원 전 구성원이 대응		

● (마)지역은 국책사업발굴단을 조직화하여, 범 연구원(지역발전연구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음

● 타 지역 검토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1) 사전타당성 평가시스템 도입, 사업계획 구체성 개선

● 지자체의 숙원사업이 대형국책사업으로 채택될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전타당성 평가 작업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기획) 준비가 요구됨

● 국책사업 성패확인에는 장기간을 요하며, 사업 담당부서는 사업계획 작성 과정에 지속적인 피드백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전담조직 설치, 업무 집중 및 전문성 향상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규 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를 위해 관련조직 정비 중(전담조직 설치, 관련 D/B 및 노하우 축적)

3) 지자체 투융자심사 강화, 예산절감 편익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투융자 심사 강화³⁾

3) 참고로 투융자 심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짐. 해당 센터에서는 의뢰된 개별 투융자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평가하고, 분석한 자료와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충남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 진단과 과제 ◀

04

1. 진단과 과제

1) 사업계획 작성시 사전타당성 검토 필요

- 신규 대형국책사업을 발굴하는 사업구상단계에서 구상(안)과 사전분석 결과와의 충분한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안사업의 채택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함
 - 사전 타당성검토에 근거한 사업구상으로 사업을 구체화 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업(안)에 대한 사전분석결과와 사업구상 사이의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 및 강화시켜야 함

2) 지속적인 사업 발굴 필요

-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연계사업화가 필요하며, 국가 중장기 예산항목에 따라 추진될 국책사업내용에 정합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업계획 수정보완, 이를 통해 중앙부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배정시키는 지원체계를 강화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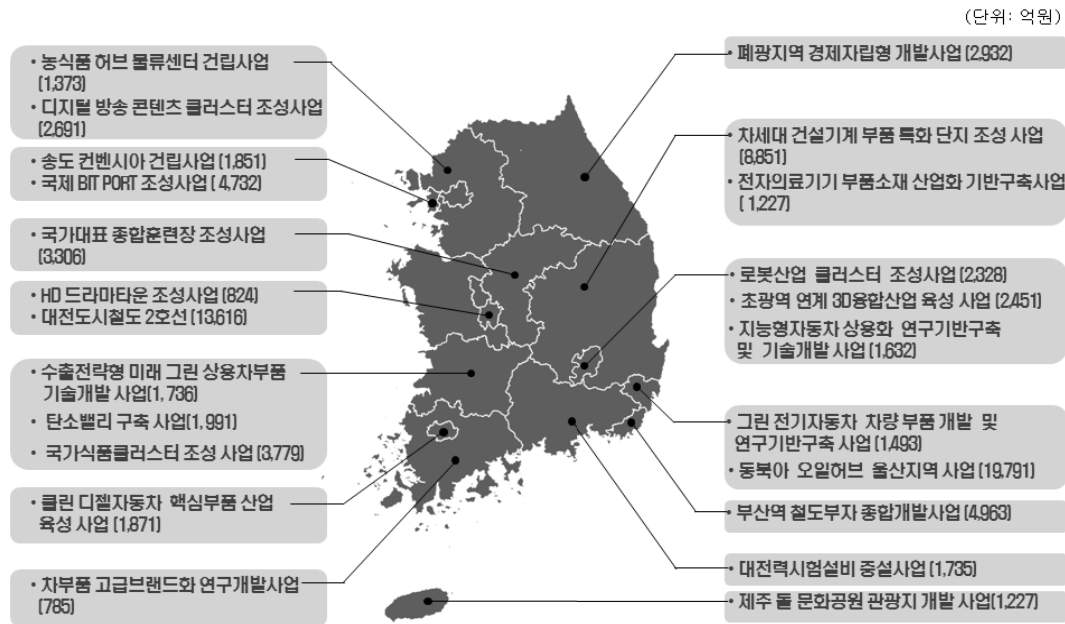
3) 체계적 대응 시스템 도입 필요

- 현재 도내에서 국책사업 추진은 충청남도와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발전연구원, 외부 기관 및 대학 등에 의해 개별사업 단위로 대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형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지원기능과 역할을 체계화시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또한 SOC사업 등의 기반시설확충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연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 분야별로 추진 노하우 축적, 관련 DB 구축 및 관리, 논리개발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을 설치하고 사업필요성이 검증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타 지역의 주요 국책사업 추진상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그림 2>와 같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

- 충남의 국책사업 추진성과를 예비타당성 통과결과로만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타지자체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그림 2> 지자체 대형국책사업 추진 현황(예비타당성 통과)

● 충남의 국책사업 추진 과정 진단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충남 대형국책사업 추진과정 단계별 진단과 과제

구분	과제
사업발굴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국책사업 발굴과 사업 다양화 필요 국가 소관부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 수정보완 필요
사전평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분석에 근거한 사업구상으로 사업타당성 강화 필요 사업구상과 사전분석 결과의 지속적인 Feedback시스템 도입 필요
협의 및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KDI, KISTEP 협의시 사업효과에 대한 근거자료 신속한 대응 필요 완료된 사업계획(안) 지속적 대응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지원기능과 역할의 체계화, 효율화 필요 지속적 관련 노하우(know-how)축적, DB구축 등의 전문적인 지원조직 필요,

- 충남의 미래를 대비한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사업,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문화, 환경, 해양, 항만, 도로, 철도, R&D 연구개발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들을 발굴하고 뿐만 아니라 도내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보완 및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사업기획 지원 강화 및 정책연계 사업화

- 충남의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단계에서 기초 DB 자료 분석, 정책동향 분석 및 사업전망 등의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사업기획을 강화시키고, 선별된 발굴된 사업에 한해 다양한 정책 연계사업으로 진행시킴

둘째, 사전평가 지원 강화 및 타당성검증 강화

- 대형국책사업이 발굴되어 국가소관부처에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시키며, 또한 도내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투융자심사 검토지원을 강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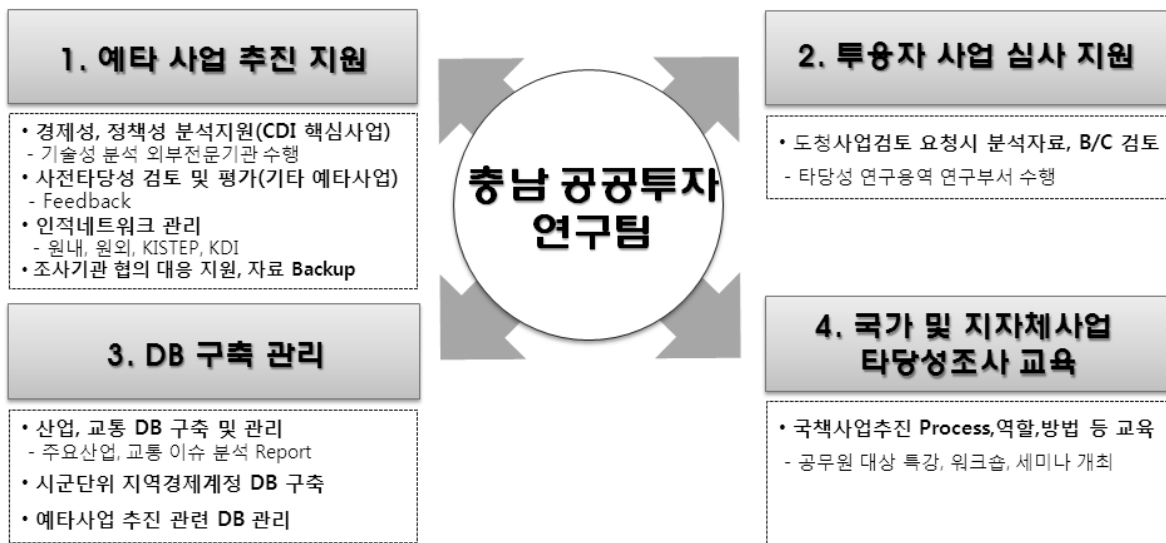
셋째, 중앙부처 협의·대응 지원 강화

- 국가소관부처가 사업을 배정할 때 충남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높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을 지원하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근거자료를 사전에 분석하여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킴

넷째, 전문화된 전담조직 설치 및 집중강화

- 대형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유치와 도내 공공투자(투융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의 대안으로서, 충청남도의 공공투자분석 및 유치지원을 위한 (가칭) 충남공공투자연구팀을 설치 및 운영하여 도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추진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 충남공공투자연구팀의 주 업무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을 기획지원, 조사분석지원 및 평가, 논리개발 등임
 - 이러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초통계 및 관련분야의 연구결과 축적이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 영역확장 과정에서 공공투자 센터로의 전환이 검토되어야 함
- 연구팀의 기본적 기능은 다음 <그림 3>과 같으며, 예비타당성 대상 도내 핵심사업 추진 시 분석지원, 도내 투융자사업심사를 위한 검토지원, 산업 및 교통 DB구축 및 관리, 국책사업추진 절차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 공무원 교육 등임




<그림 3> (가칭)충남공공투자연구팀 기능(안)

- 충남공공투자연구팀 업무의 진행절차는 대형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가칭) 「충남국책사업 포럼」운영을 통해 선정된 사업아이템을 충남도청, 충남발전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관련 전문기관 등과 사업기획에 참여하고 초기 사업계획(안)이 작성되면 사전타당성을 분석 및 평가 후 최종사업계획 확정, 소관부처 사업제안으로 이루어짐
- 진행과정을 세분화하면, 사업발굴단계, 사업기획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제안 수정보완 단계, 협의 및 대응의 5단계 프로세스이며, 단계별 주요 요소는 다음 <표 4>와 같음

<표 4> 대형국책사업 유치 지원 강화를 위한 5단계 프로세스

단 계	주요 요소
1단계: 사업 발굴단계	1.1 아이디어 공모 1.2 정책모니터링 1.3 경제동향 분석 1.4 국책사업 발굴 포럼
2단계: 사업 기획단계	2.1 초기 사업구상 작성 2.2 사업아이템 평가 2.3 사업구상 수정 및 조정(1차 Feedback) 2.4 우선순위 높은 사업 선정
3단계: 사업계획 수립단계	3.1 계획수립 주체 선정 3.2 계획수립 진행 3.3 사업 계획 사전평가 및 조정(2차 Feedback) 3.4 최종사업계획안 작성
4단계: 사업제안 및 수정보완단계	4.1 소관부처 사업제안 및 협의 4.2 사업계획 수정보완 및 변경(3차 Feedback) 4.3 사업우선순위 배정 논리 대응
5단계: 협약대응단계	5.1 평가기관 자료 Back-up 5.2 분석결과 논리적 대응

- 위와 같은 기능의 연구팀이 설립된다면 연구팀 기능을 주관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역할과 업무를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기반조성), 중기(노하우, 관련DB축적), 장기(국책사업추진 시스템 체계화 및 효율화) 등의 목표설정이 포함된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또한 예비타당성 대상 대형국책사업 프로젝트가 도내 실질적인 부의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 선정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이 반드시 필요함 

이 중 윤 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

041-840-1166, space@cdi.re.kr

임 재 영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

041-840-1160, chyim@cdi.re.kr

◆ 참고 자료 ◆

기획재정부(201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2013), ‘총사업비 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2013),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충남발전연구원(2013-2014), 충남의 국책사업 유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1차~4차 워크숍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9년 ~ 2013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4년도 충남리포트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호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협 혁신 성공 전략	이호중	2014.07.16
2014-23	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정체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찬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흥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기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등급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언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현 외	2014.10.08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과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 · 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 · 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야	2014.11.26
2014-49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종화	2014.11.26
2014-50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박경철	2014.11.26
2014-51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채진원 외	2014.12.03
2014-52	충남도과 중국 헤이룽장성 교류협력전략	박인성	2014.12.04
2014-53	인권 선진으로 나가는 충남의 정책과제	성태규	2014.12.10
2014-54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4.12.17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